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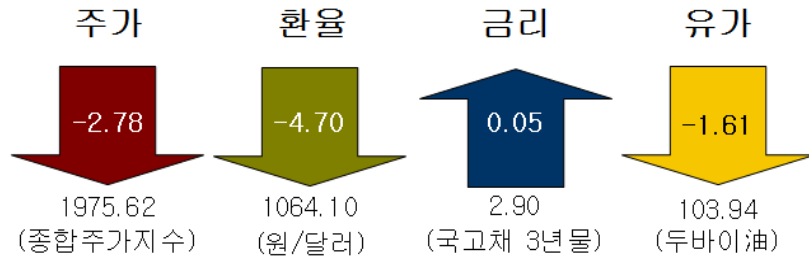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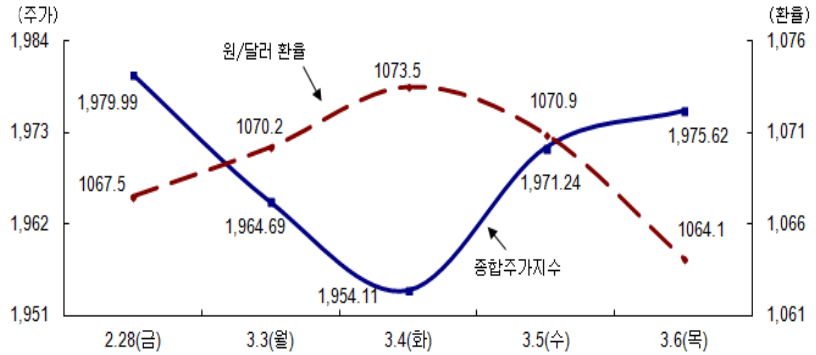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 연평균 일자리 11.5만개, 경제성장률 0.5%p 기회 상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28~3.06)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최 성 근   선 임 연 구 원 (2072-6223, csk0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 ■ 민간소비 부진과 국내 경제 침체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인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10년 새 5.1%p나 감소하였다.

#### ■ 소비 부진의 요인 분해

국내 소비 부진 현상을 국민소득의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 이를 다음과 같이 가계소득 비중, 가처분소득 비중, 평균소비성향 3가지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분해를 통한 분석은 가계소비의 부진 현상을 가계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소비성향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rac{\text{가계소비}}{\text{국민소득}} = \frac{\text{가계소득}}{\text{국민소득}} \times \frac{\text{가처분소득}}{\text{가계소득}} \times \frac{\text{가계소비}}{\text{가처분소득}}$$

(가계소득 비중)      (가처분소득 비중)      (평균소비성향)

**(가계소득 비중 하락)**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2000년~2012년 기간 가계소득은 412조원에서 796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GNI 연평균 증가율 6.9%보다 낮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GNI 증가율을 하회함에 따라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8.7%에서 2012년 62.3%로 감소하였다. 특히 가계소득에서 임금소득의 비중은 커진 반면, 자영업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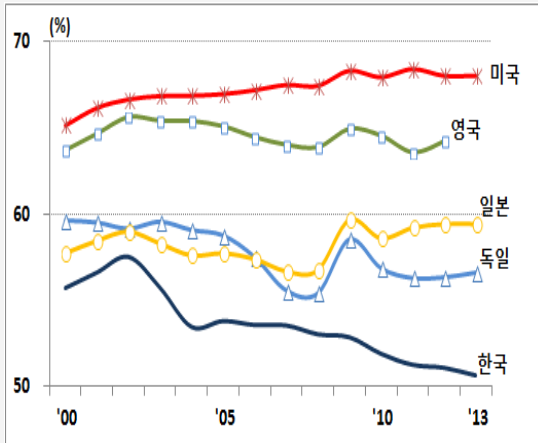
**(가처분소득 비중 감소)**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부진하면서 가계소득 중 가처분소득의 비중 감소하고 있다. 2000년~2013년에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9%였으나,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5.3%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3%에서 2013년 81.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비소비지출 항목 중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0.4%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 등 연금기여금도 9.5%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소비성향 하락)**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전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000~2013년에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동기간 연평균 4.6%에 그쳤다.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 80.6%에서 2013년 73.4%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한 반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정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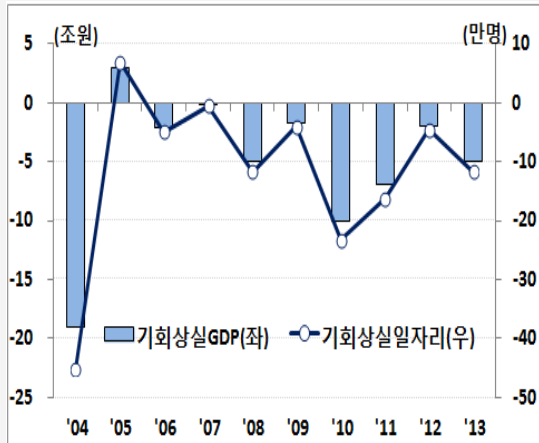
## ■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경제적 기회상실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경제적 기회상실을 추정하기 위해 우선 민간소비 침체가 본격화된 카드사태 이후(2004~2013년) 각 연도별 소비증가율이 당해의 GDP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주요국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기회상실 GDP와 일자리>



(기회상실 민간소비와 GDP) 만약 2004~2013년 각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해의 GDP 증가율과 동일했다 가정하면, 기회상실 민간소비와 GDP는 연평균 4.9조원이고, 이로 인해 GDP 증가율이 0.5%p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회상실 일자리와 고용률) 만약 2004~2013년 각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해의 GDP 증가율과 동일했다 가정하면, 기회상실 일자리는 연평균 11.5만개이고, 이로 인해 고용률이 0.3%p 상승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간 민간소비가 침체하는 대신 GDP 증가율만큼 유지되었다면, 연평균 11.5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었고 고용률도 연평균 0.3%p만큼 상승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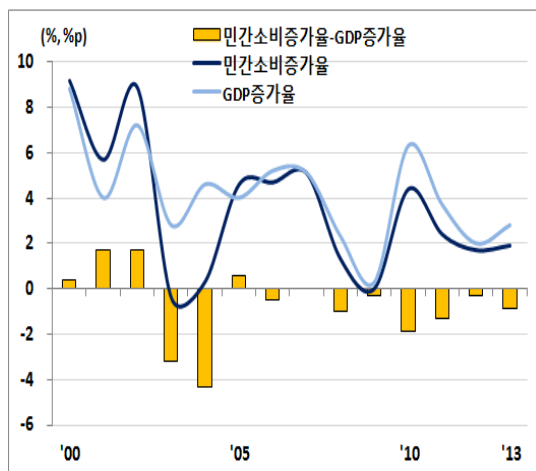
## ■ 시사점

가계소득 감소, 가처분소득 감소,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으로 민간소비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첫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과 기업이익 증가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고, 연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계층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노후 불안 및 주거 불안 개선, 일자리 안정성 제고 등 가계의 소비 불안 심리를 개선하여 평균소비성향을 높여야 한다.

## 1. 민간소비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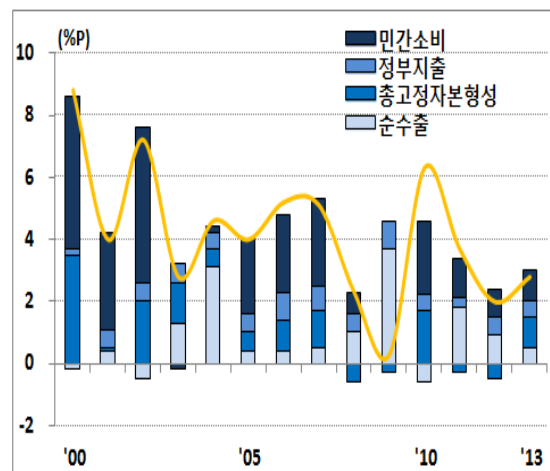
-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이전보다 하락하는 등 국내 민간소비의 부진이 심각
  - 2009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GDP 증가율을 하회
    - 2013년 GDP 증가율은 2.8%를 나타냈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이보다 0.9%p 낮은 1.9%를 기록
    - 2003년 카드사태시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2년 만에 회복. 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까지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
    -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밑도는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소비 침체에 따르는 국내 경제 침체가 우려
  -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이전보다 크게 하락하여 부진세 지속
    - 금융위기 이전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2000~2005년 평균 2.6%p, 2005~2010년 1.7%p, 2011~2013년 1.1%p로 하락세 지속
    - 2013년에는 추경 편성 등으로 정부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가 증가했으나,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회복이 없이는 국내 경제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지출항목별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 소비 부진의 요인 분해

○ (분석 방법) 국민소득<sup>1)</sup>의 관점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세부 요인별로 분해하여 국내 소비 부진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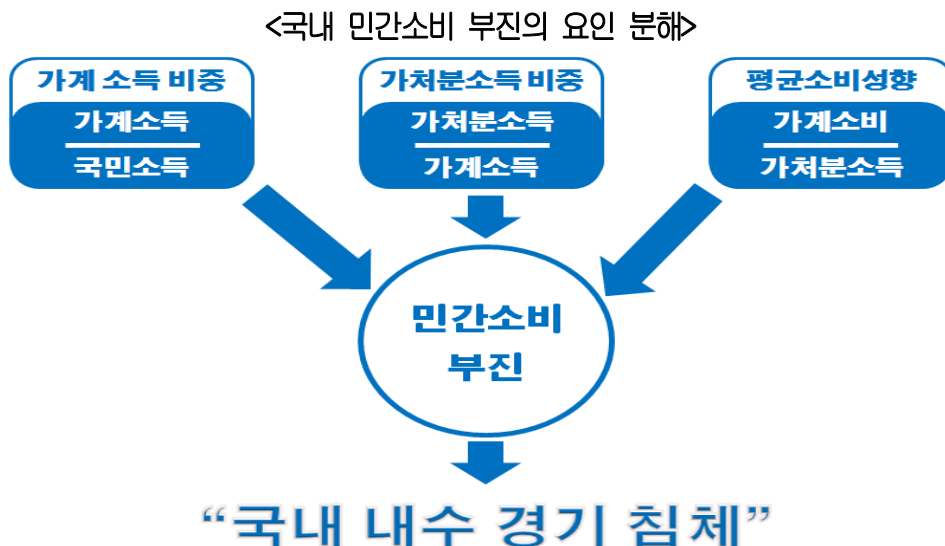
- 국민소득 대비 민간소비를 가계소득 비중, 가처분소득 비중, 평균소비성향 3가지의 요소로 분해

$$\frac{\text{가계소비}}{\text{국민소득}} = \frac{\text{가계소득}}{\text{국민소득}} \times \frac{\text{가처분소득}}{\text{가계소득}} \times \frac{\text{가계소비}}{\text{가처분소득}}$$

(가계소득 비중)    (가처분소득 비중)    (평균소비성향)

- 기존의 소비함수와 달리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계소득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민간소비의 부진 현상을 일관된 분석 틀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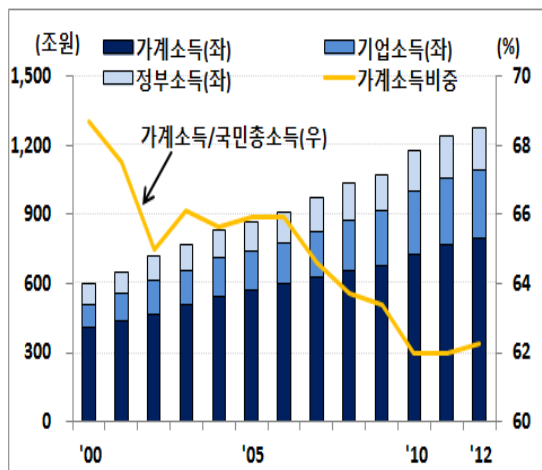
- 민간소비 부진을 요인별로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 영향을 추정 한 뒤 민간소비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자국민의 해외소득)을 더한 것으로, GNI와 GDP의 차이는 사실상 크지 않음. 본 연구는 소비부진의 원인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GDP 대신 GNI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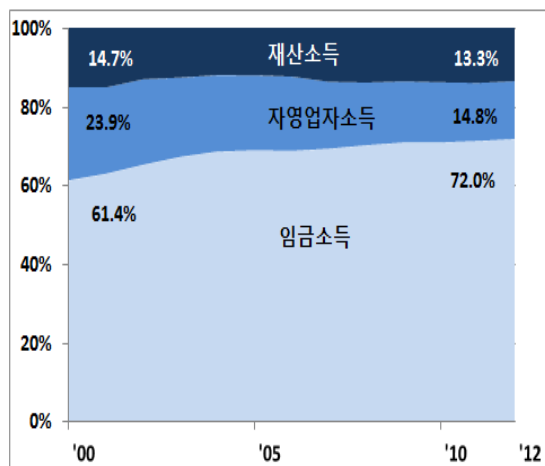
- (가계소득 비중 하락)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보다 낮아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
  -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 2000년~2012년 기간 가계소득(명목기준)은 412조원에서 796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GNI 연평균 증가율 6.9%보다 낮음
    - 동기간 정부소득은 연평균 7.0%로 GNI 증가율 6.9%과 비슷하고,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로 GNI 증가율을 상회
    - 가계소득 증가율이 GNI 증가율을 하회함에 따라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8.7%에서 2012년 62.3%로 감소
  - 특히, 가계소득에서 임금소득(피용자보수)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소득(영업잉여)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2000~2012년 임금소득은 비중은 61.4%에서 72.0%로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는 23.9%에서 14.8%로 급감. 재산소득 비중은 14.7%에서 13.3%로 소폭 감소
    - 가계소득 중 임금소득(피용자보수)증가율은 2000년~2012년에 연평균 7.2% (명목기준)을 기록한 반면 자영업자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7%에 불과
  - 이는 국민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 소득 부진이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가계·기업·정부 소득과 GNI대비 가계소득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명목 기준.

〈가계소득 구성 항목별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명목 기준.

○ (가처분소득 비중 감소)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해 부진하면서 총가계소득 중 가처분소득의 비중 감소

-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지면서 전체 가계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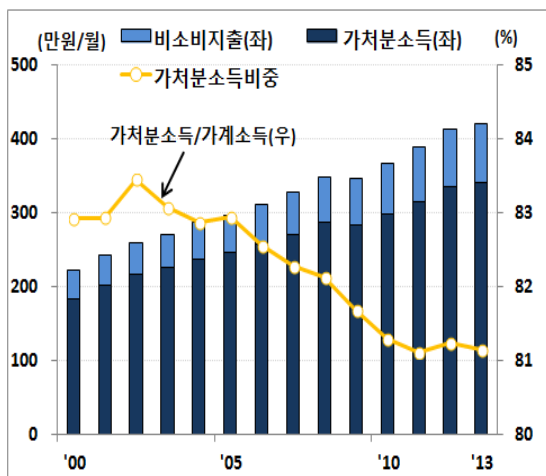
- 가처분소득이란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
- 2000년~2013년에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9%였으나,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5.3%에 불과
- 이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3%에서 2013년 81.1%까지 감소

-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높고, 그중 특히 연금 및 사회보험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2000~2013년에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3%였으나, 비소비지출은 이보다 높은 연평균 5.7%를 기록
- 동기간 비소비지출 항목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4%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 등 연금 지출이 9.5%가 두 번째로 높았음

- 이러한 가계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결국 가계의 소비지출 여력을 떨어뜨림으로써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가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명목 기준.

<가계 구성항목별 비소비지출 추이>

(만원, %; 월평균)

구분	'00	'10	'13	연평균 증가율
비소비지출	37.9	68.6	79.2	5.7
조세	7.1	12.2	14.6	6.0
연금	4.2	9.6	11.7	9.5
사회보험	3.3	9.2	11.8	10.4
이자비용	4.6	8.1	9.8	4.8
기타	18.7	29.5	31.2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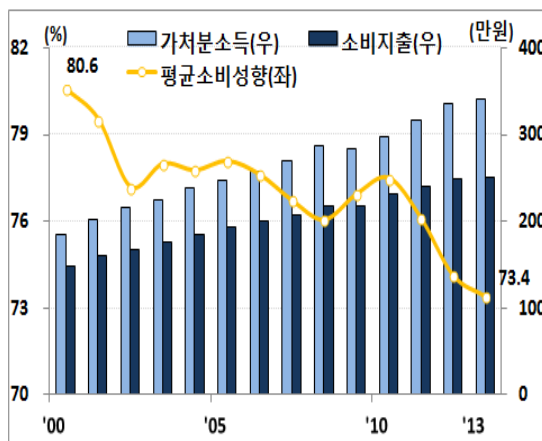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 1) 2인 이상 도시가구, 명목 기준.  
2)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기여금, 사회보험은 건강/고용/산재보험 포함.



○ (평균소비성향 하락)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전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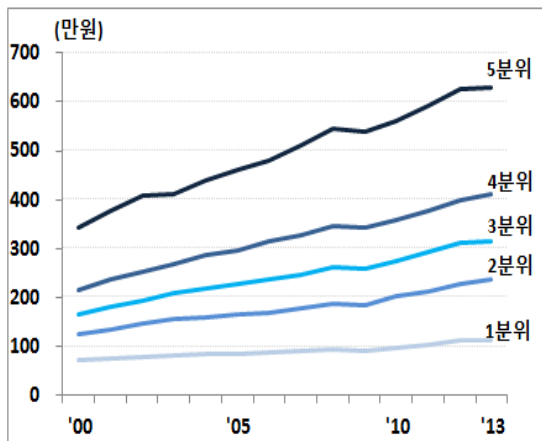
-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아 평균소비성향은 하락세 지속
  - 평균소비성향이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 가계의 가처분소득(명목기준)은 2000~2013년에 연평균 5.3% 증가. 반면 가계의 소비지출(명목기준)은 동기간 연평균 4.6%에 그침
  -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 80.6%에서 2013년 73.4%까지 하락
- 특히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정체
  - 소득 5분위의 가처분소득(명목기준)은 2000년 419만원에서 2013년 794만원으로 연평균 5.1% 증가. 반면 1분위의 가처분소득(명목기준)은 2000년 85만원에서 2013년 139만원으로 연평균 3.9% 증가에 그침
  - 최근에는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등에 따르는 예비적 저축 동기 상승이 가계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2)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 즉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결국 민간 소비 부진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

<가계 평균소비성향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1) 2인 이상 도시 가구, 명목기준.  
 2)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소득 분위별 월가처분소득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2인 이상 도시 가구, 명목 기준.

2)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현대경제연구원,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시사점” 『경제주평』 13-44. no 561.을 참고.

### 3.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경제적 기회상실

○ (가정) 2004~2013년 각 연도별 민간소비<sup>3)</sup> 증가율이 당해의 GDP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경제적 기회상실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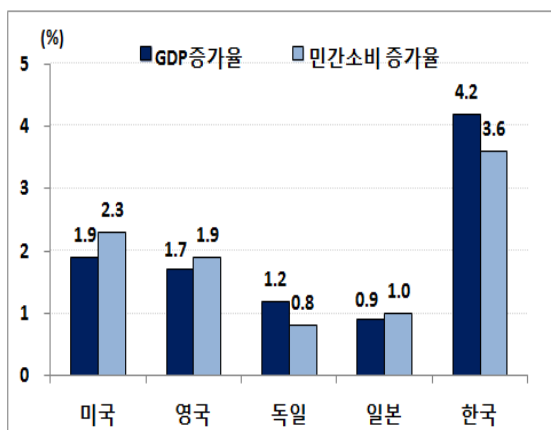
- 주요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높은 수준.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민간소비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음

- 2000~2013년에 독일<sup>4)</sup>을 제외한 주요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모두 GDP 증가율을 상회.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0% 내외로 높은 수준
-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고, 민간소비의 비중도 2003년 카드사태 이후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2013년 50.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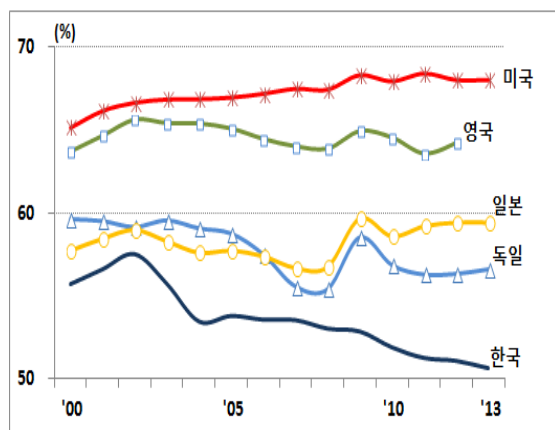
- 카드사태 이후(2004~2013년) 각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해의 GDP 증가율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소비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상실을 추정

- 2004~2013년 각 연도별로 GDP 증가율 수준만큼 민간소비가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실제 민간소비가 그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와 GDP의 기회상실분을 추정하였음

<주요국 GDP와 민간소비 연평균 증가율 2000~2013>



<주요국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자료 : OECD.

주 : GDP와 민간소비는 실질 기준.

3) 여기서 민간소비는 국민계정상 최종수요항목의 부가가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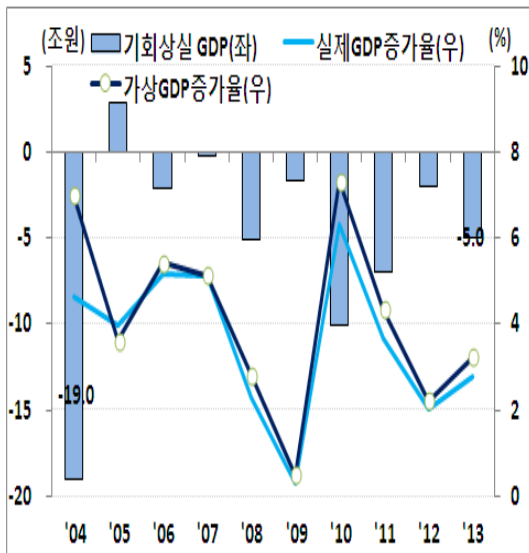
4) 독일의 경우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통합시장이 마치 내수시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낮은 것임.

- (기회상실 민간소비와 GDP) 만약 2004~2013년 각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해의 GDP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기회상실 민간소비는 연평균 4.9조원이고, 이로 인해 GDP 증가율이 0.5%p 상승할 기회 상실
  - 기회상실 민간소비 : 2004~2013년까지 소비 침체로 인한 기회상실 민간소비는 연평균 4.9조원으로 추정
    - 2004년~2013년에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GDP 증가율'로 가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연도별 가상 민간소비액을 추정
    - (추정된 가상 민간소비 - 실제 민간소비)를 적용하여 각 연도별로 창출될 수 있었던 기회상실 민간소비액을 계산
    - 2004~2013년 각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동일했다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4.9조원 늘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기회상실 GDP : 민간소비 감소에 따른 기회상실 GDP는 연평균 4.9조원이며, 이로 인해 GDP 증가율이 연평균 0.5%p 상승할 기회 상실 추정
    - 2004~2013년에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GDP 증가율'이라고 가정하면 소비 침체로 인해 상실된 민간소비는 연평균 4.9조원
    - 민간소비는 국민계정상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기회상실 민간소비는 곧 기회상실 GDP와 동일
    - 기회상실 GDP를 연도별 GDP 실적치에 더했을 경우, GDP 증가율은 기존보다 연평균 0.5%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 (기회상실 일자리와 고용률) 2004~2013년에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동일했다면 기회상실 일자리는 연평균 11.5만개이며, 이로 인해 고용률이 0.3%p 상승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
  - 기회상실 일자리 : 각 연도별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동일했다고 가정하고, 취업자수와 기존 취업자수와의 차이를 통해 상실된 취업자수를 추정
    - 앞선 가정에 따라 기회상실 민간소비는 연평균 약 4.9조원
    - 민간소비는 부가가치 개념이므로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각 연도별 기회상실 민간소비/부가가치 유발계수)를 통해 '소비지출액'<sup>5)</sup>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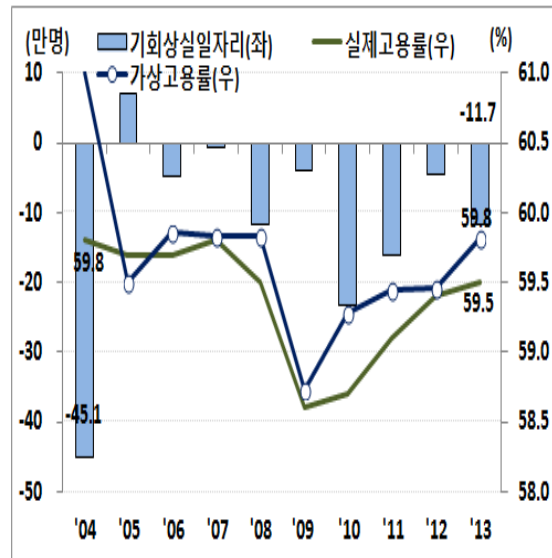
5) 여기서 '소비지출액'이란 실제로 민간이 소비한 지출액을 뜻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중간소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기회상실 소비지출액 × 각 연도별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추가로 생겨날 수 있었던 일자리는 연평균 11.5만개로 추정
  - 따라서 만약 민간소비가 침체되지 않고 연도별로 GDP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더라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고용률 하락 : 가정에 따라 추정된 연도별 추가 취업자수를 기존의 취업자수와 더해 가상의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추정
- 고용률의 정의(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에 따라 가상 취업자수를 연도별 생산가능인구로 나눠주면 각 연도별 가상 고용률을 산출
  - 이에 따라 만약 2004~2013년에 민간소비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용률은 기존의 연평균 59.4%보다 0.3%p 높은 59.7%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기회상실 GDP 추정>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기회상실 일자리 및 실제고용률과 가상고용률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추정.

주 : 1) GDP와 민간소비 등은 모두 실질 기준.

2) 기회상실 GDP는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GDP 증가율로 가정하고 추정한 민간소비에서 기존의 민간소비 실적치를 차감한 액수임.

3) 가상 GDP 증가율은 기회상실 GDP를 기존 GDP에 추가했을 경우 각 연도별로 추정되는 기존 GDP대비 증가율임.

3) 기회상실일자리 = (기회상실 민간소비/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불변기준).

4) 고용률은 통계청의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수를 기초로 계산하였음.

5) 가상고용률이란 기회상실 일자리를 기존 취업자수에 더하여 산출한 고용률.

#### 4. 시사점

- 가계소득 감소, 가처분소득 감소,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으로 민간소비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
  - 민간소비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다른 부문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 침체는 곧 국민 경제의 침체로 직결됨
  - 따라서 침체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평균소비성향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함
  - 첫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확대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자연스럽게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공공부문에서 교육, 보건,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고용 제도 개선 및 직업 훈련 강화
    -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과밀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컨설팅과 창업 교육기회 등 확대 제공
  - 둘째,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경감시키는 한편, 연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계층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조정

-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고금리의 비은행권 가계부채를 저리의 제1금융권으로 이전하는 등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유도
  - 연금 및 사회보험료의 지출 증가율이 높아 소득계층별로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셋째,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
-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소득 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다양한 눈높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능력이 부재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 전소득을 통한 지원을 확대
  - 반면 소비여력은 충분하나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급 리조트 및 복합 관광 단지 개발 등 관광 인프라 개선
  - 또한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 확대를 위해 국내 명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넷째, 노후 및 주거 불안 개선, 일자리 안정성 제고 등 소비 불안 심리를 개선하여 평균소비성향을 회복**
- 노후 불안을 제고하기 위해 재형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
  -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자 고용을 확대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제공
  -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계의 소비를 저해하는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킬 필요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3.2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0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27일	3월 6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4	2.74	0.10%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38	102.35	-0.03¥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682	1.3733	0.0051\$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273	16,422	149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923	15,135	21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5	2.90	0.05%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68.8	1,064.1	-4.7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78.4	1,975.6	-2.8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27일	3월 6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2.34	101.67	-0.67\$
	Dubai	107.99	100.38	107.88	105.55	103.94	-1.61\$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2.26	308.28	6.02\$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6	2.8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1	1.9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8.3	6.9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7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410	707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